

권두언



강윤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이환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발현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예방이 가능하나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정의된다. 생활습관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급격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WHO는 2002년에 ‘혁신적인 만성질환관리(Innovative Care for Chronic Conditions, ICC) 모형’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 영역의 핵심요소들이 만성질환 관리의 체계 속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들 핵심요소에는 예방, 환자 교육 및 자가 관리능력 강화,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보체계 활용, 인력개발과 배분, 지속적인 재원조달 촉진, 법률제정 등 필요 요소들이 총 망라된다.

일본이나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도 국가 단위의 만성질환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자국의 보건의료 환경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교육·홍보, 사례관리, 보건복지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관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영역에서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

적으로 환자와 공급자 및 지역사회를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HIRA정책동향에서는 국내의 만성질환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정책현안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종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지원사업과 건강검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12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현재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각 주체들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지적하듯이 각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생활습관의 변화나 인구노령화 이외에도 사회문화 환경이나 기후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정신과 질환이나 만성호흡기 질환의 증가, 암이나 AIDS/HIV와 같은 중증질환의 만성질환화(化)와 같이 보건문제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예정인 사업들의 강화는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전략의 개발과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HIRA정책동향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실린 원고들이 만성질환 관리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